

#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박문수(산업연구원)

## I. 규제와 경제성장

### (1)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경로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완화는 해당 경제의 성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규제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음(-)의 관계로 단순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규제의 입안이 시장거래를 확대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규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입안된 규제안은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규제는 경제성장에 양(+ )의 효과와 음(-)의 효과가 공존하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규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정보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외부비경제(negative externality)와 같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도입된다. 이와 같이 시장실패 요인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는 규제도입에 따른 법 이행 절차(compliance)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왜곡(market distortion)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 유인 저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 수준 하락, 진입장벽의 역할 등과 같은 원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작용하여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은 시장실패 보다 더 큰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입안된 규제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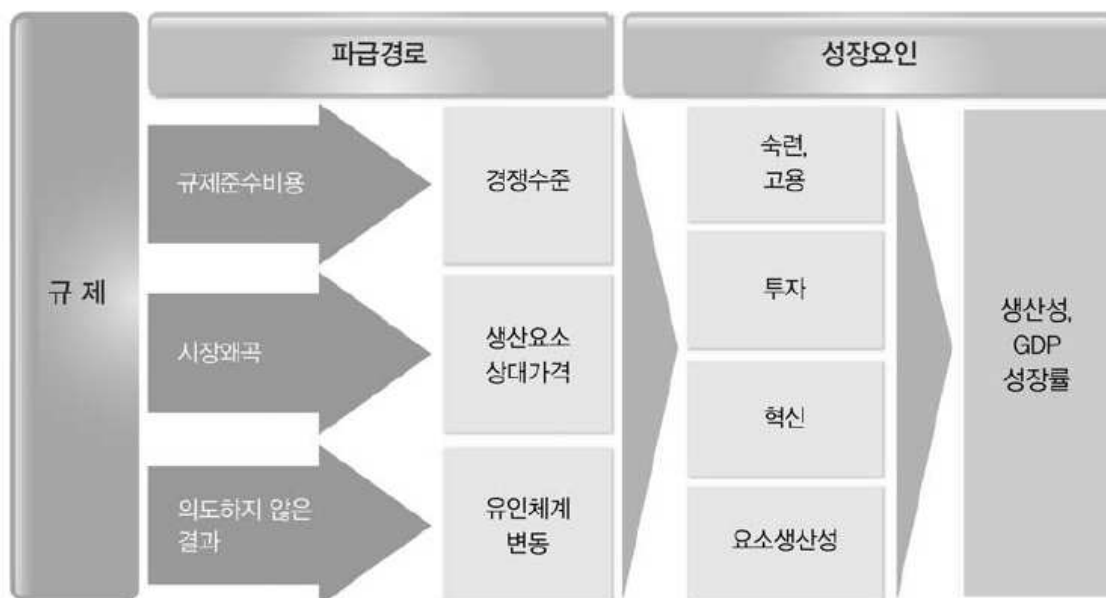
또한 시장 실패의 방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안된 규제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정부의 규제입법 취지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적 화합, 평등 혹은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규제안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다.<sup>1)</sup> 다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기존 이익집단의 이윤행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등의 행태(rent-seeking behavior)를 보장하는 규제행위는 경제성장에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규제의 입안이 경제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규제 입안을 통한 시장실패 개선효과가 규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정부실패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하지만 규제의 입안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전적으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규제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규제 지표 혹은 규제지수의 작성을 통해 규제지수와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두 변수의 상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파급경로는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제의 입안은 고용, 투자, 혁신, 총요소생산성 등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그림 1 >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흐름도



자료: Frontier Economies(2012), 이종한(2013)에서 재인용

1) 예를 들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입안된 안전관련 규제안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선행 연구

규제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두 변수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노동생산성, 투자, 혁신, 중요소생산성 등과 요인들과 규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규제의 주요 지표로는 주로 OECD 지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ranking, Fraser Institute of Economic Freedom index 등의 총량규제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규제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규제의 정도가 한 나라 경제성장의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즉,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며, 규제완화의 효과는 특정 국가의 규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Gorgens et al., 2003; Djankov et al., 2006; Busse and Groizard, 2008; Jacobzone et al., 2010; 한국은행, 2008).

먼저 Gorgens et al(2003)은 Fraser Institute of Economic Freedom Index를 이용하여 규제가 성장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모두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규제와 성장 사이의 관계는 비선형임 관계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규제가 강한 나라들은 규제가 덜한 나라들보다 평균적으로 2-3% 낮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sup>2)</sup> 이러한 결과는 규제는 시장실패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만약 지대추구(rent-seeking)과 같은 다른 대상들을 기반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성장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Djankov et al.(2006)은 1993-2002년의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dicators 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 135개국을 규제의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규제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정국가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커질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 수준에 따른 국가 그룹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규제의 강도가 가장 강한 그룹에 속한 국가가 규제의 수준을 가장 약하게 할 경우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3%p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강도가 커질수록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현저히 늘어나 기업의 기술진보율 저하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정도가

2) 규제와 경제성장간 관계가 비선형이라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일수록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가할 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Busse and Groizard(2008)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dicators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FDI는 한 나라의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하지만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술의 확산을 더디게 하고 인적자본의 교류를 저해함으로써 FDI가 경제성장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석결과, 지나치게 과도한 사업상 규제와 노동시장의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FDI의 확대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해당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Jacobzone et al.(2010)은 경제의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산업생산성이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시장역동성(market dynamics)에 주목하여 1998-2005년 동안의 OECD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가 시장역동성(market dynamic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증가는 시장역동성을 저해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은행(2008)은 1998-2005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10% 완화될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약 0.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기반으로 규제와 경제성장간에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 혹은 기업수준에 부과되는 생산물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Poschke, 2010; Griffith, Harrison and Simpson, 2010; Bourles et al., 2009). 이들은 생산물시장규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여 시장내 잠재적 경쟁기업의 수를 줄이고, 기존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수준을 떨어뜨리고, 요소 및 중간재의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생산물시장규제의 강도가 커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유인은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활동 유인 역시 저하되어 결국에는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Poschke(2010)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진입비용의 차이가 국가간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를 연구하였다. 그는 진입비용을 기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진입에 요구되는 행정비용이 늘어날수록 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의 수는 줄어들게 되어 해당시장의 경쟁수준은 낮아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시장진입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1인당 GDP의 1.7~10% 증가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약 0.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iffith, Harrison and Simpson(2010)은 규제완화가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기업의 혁신활동과 총요소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1985-2000년 동안 OECD 12개국을 대상으로 Single Market Programme(SMP)라는 생산물 시장규제와 기업의 이윤, R&D 지출,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간재의 가격의 편차가 큰 시장에서는 SMP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ourles et al(2009)은 1985-2007년 동안 OECD 15개국, 20개 산업을 대상으로 upstream market에서 부과된 규제가 downstream sector 생산성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upstream market에서 부과된 규제를 제거할 경우 Multi-factor productivity 성장을 매년 1.7%p 까지 증가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 II. 우리나라 산업별 규제 추이

산업을 18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규제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 규제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이종한(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르고 있다.<sup>3)</sup> 이종한(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규제지수 작성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I_j = \sum_{i=1}^n (RCL_{ij} \times \sqrt{WR_{1i} \times WR_{2i} \times WA_i \times WT_i})$$

(단,  $i$  = 규제수 [16, 198개],  $j$  = 업종 [18개])

-  $RI_j$  =  $j$  산업의 규제지표

3)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이종한(2013), 한국행정연구원

- $RCI_j = \frac{MIL_{ij}}{\sum_{j=1}^m \sum_{i=1}^n MIL_{ij}}$ :  $i$  규제의  $j$  산업 관련도  
(단, 이 때  $MIL_{ij}$ 는  $i$  규제의 근거법령 상  $j$  산업에 대한 언급 빈도)
- $WR_{1i}$  (규제성격 분류별 가중치): 경제적 규제 = 3, 사회적 규제 = 2, 행정적 규제 = 1
- $WR_{2i}$  (규제성격 세부분류별 가중치): 진입 = 4, 가격 = 3, 거래 = 2, 품질 = 1, 투입 = 4, 성과 = 2.5, 시장유인 = 1
- $WA_i$  (규제 증감 가중치): 강화 = 1.5, 완화 = 0.5, 폐지 = -1, 그외 = 1
- $WA_i$  (규제 유형별 가중치):
  - 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추천/동의/기타 = 4
  -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고용의무, 금지 = 3
  - 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별, 기타3 = 2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기타4 = 1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규제지수는 크게 저장(stock)지수와 유량(flow) 지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유량규제지수는 일정 기간(1년 단위)의 규제의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규제 수준의 변화 속도를 나타낸다. 저장규제지수는 연도별 유량규제지수를 누적한 값으로서 특정산업의 규제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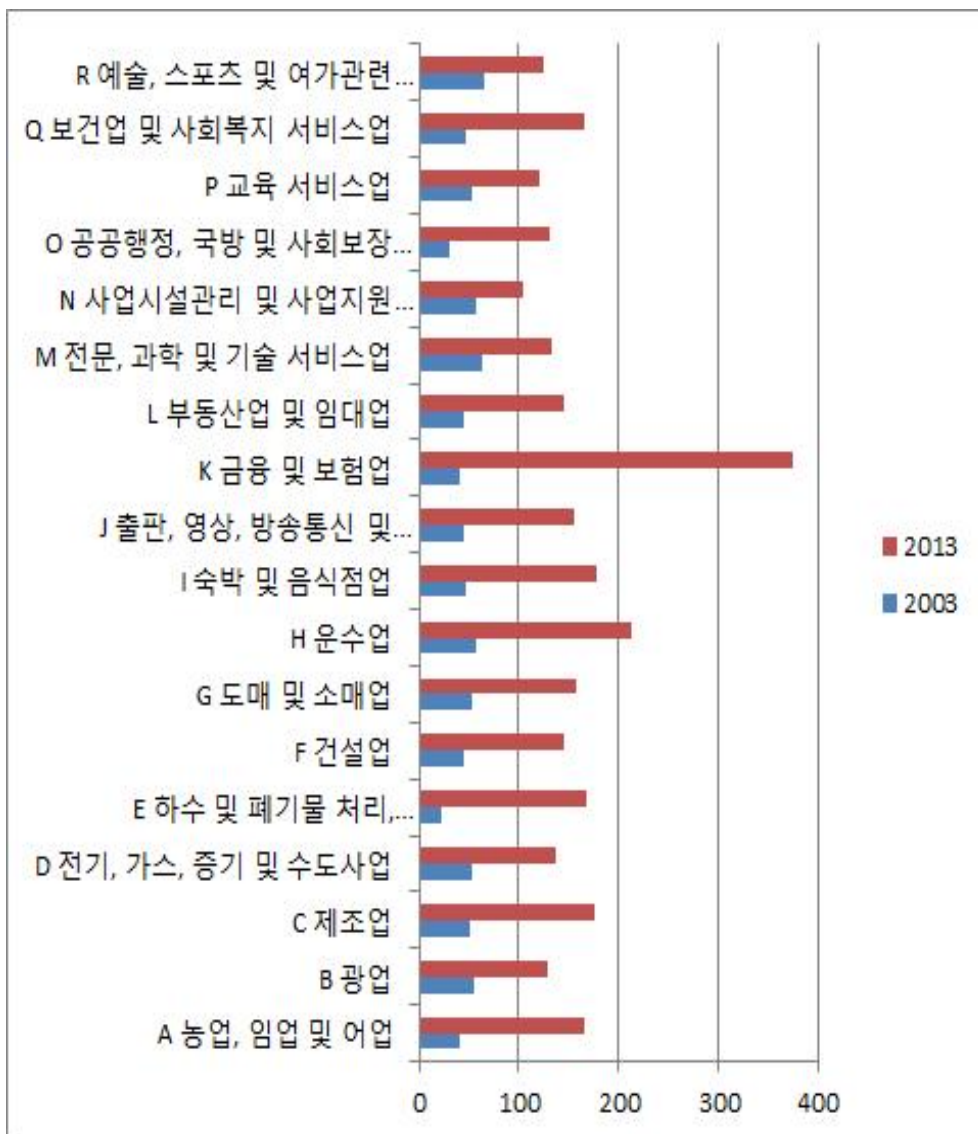
#### (1) 대분류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본 연구에서는 2003년과 2013년의 규제지수를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상 18개 대분류산업의 규제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그림 2 참조>).

먼저 2008년 각 산업별 누적된 규제지표를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산업별 저장규제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3년의 경우에 비해 2013년의 규제정도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2003년 산업규제지수가 40.18에서 2013년 375.2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및 보험업의 저장규제지수, 즉 누적규제지수가 2003년에서 2008년의 5년 동안 약 60%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2013년의 경우에는 2008년 대비 5년 동안 약 3.7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분석기간 중 규제수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을 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2003년 56.56에서 2013년에는 104.58로 규제수준의 변화가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역시 2003년 65.04에서 2013년에는 125.3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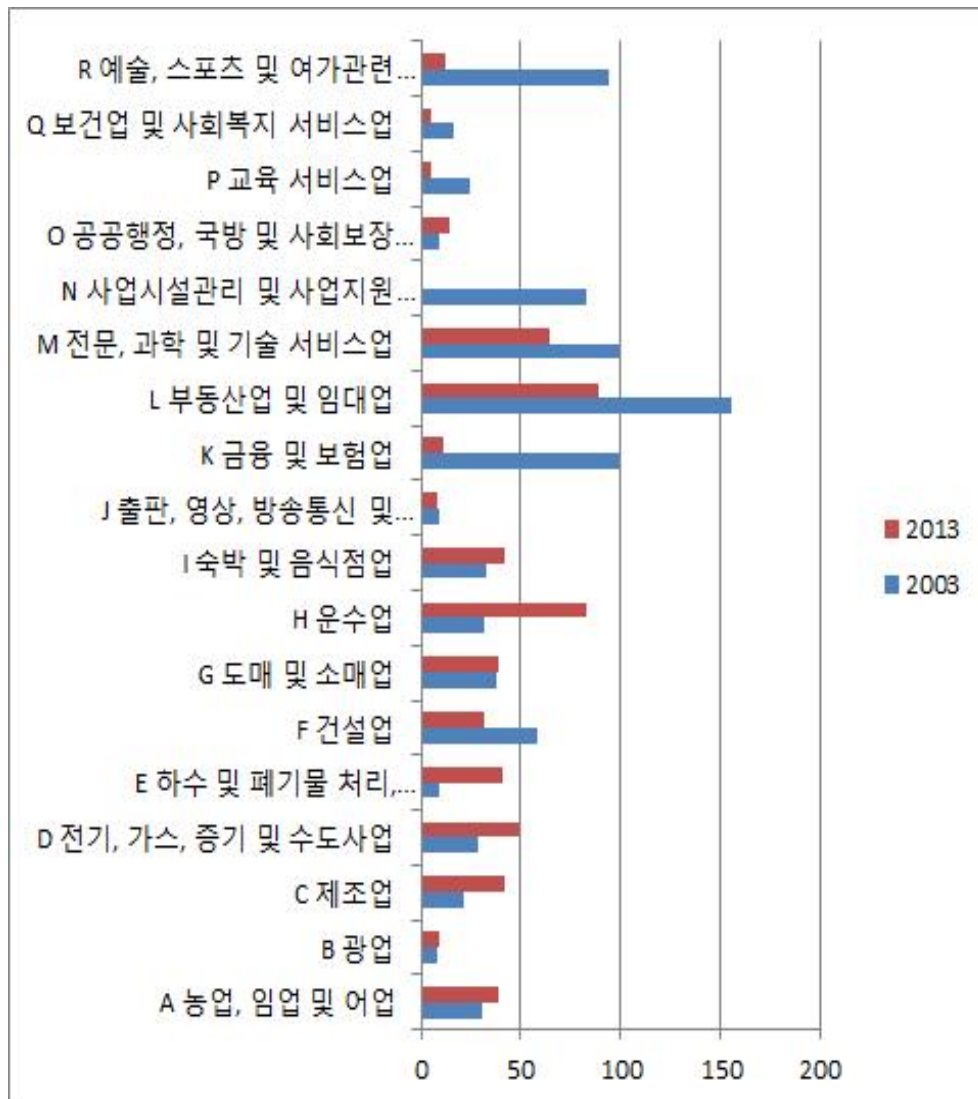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2003년 53.58에서 2013년에는 119.7로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3년 기준 여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과 운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의 규제수준(176.4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2008년 대비 규제의 정도는 대부분 30~50% 내외의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 > 표준산업분류(대분류)별 저량규제지수



이어서 일정기간 동안의 규제정도를 나타내는 유량규제지수를 기준으로 업종별 규제의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참조>).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에서는 규제의 수준이 2013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2003년에 비해 2013년의 규제정도는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 경우에는 2003년 유량규제지수가 155.64에서 2013년 88.92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2003년 유량규제지수가 99.15에서 2013년 10.8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 교육,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도 2003년에 비해 2013년의 규제정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 > 표준산업분류(대분류)별 유량규제지수





업종별 규제의 정도를 저량과 유량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증가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이 저량규제지수와 유량규제지수의 양상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는 업종도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2003년과 2013년의 두 해를 비교하여 개별 업종별 규제의 정도와 규제증감의 속도를 규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업종별 규제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 (2) 대분류 산업별 규제 현황 및 변화 추이

분석기간으로 설정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분류 산업(업종)별 유량규제지수의 현황 및 변화 추이는 < 표 1 >과 < 그림 4 >에 제시되어 있다. < 표 1 >과 < 그림 4 >의 유량규제지수는 2008년을 100으로 놓고 각 연도별 18개 산업에 대한 규제지수를 정규화한 결과를 의미한다.

< 표 1 >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현황

업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증가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45.01	28.13	11.15	100.00	2.29
B 광업	49.29	48.39	7.83	165.24	1.98
C 제조업	69.45	43.92	21.46	178.36	6.91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7.37	62.10	28.81	245.73	5.50
E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9.01	28.80	8.68	100.00	16.70
F 건설업	76.25	29.77	32.00	130.10	-5.77
G 도매 및 소매업	71.73	32.43	37.58	117.39	0.11
H 운수업	150.60	177.39	31.60	656.15	10.18
I 숙박 및 음식점업	128.67	78.46	32.24	328.28	2.63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38	38.75	7.82	112.65	-1.43
K 금융 및 보험업	327.81	753.58	10.88	2577.53	-19.8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8.76	117.28	46.86	459.73	-5.4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7.76	409.10	44.62	1349.02	-4.1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3.80	89.60	0.00	276.80	-9.4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4.34	74.20	9.64	263.22	3.84
P 교육 서비스업	42.17	31.85	4.83	100.00	-14.9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85	30.16	4.75	100.00	-11.8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4.78	67.02	11.89	213.32	-18.67%

< 그림 4 >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 표 1 >과 < 그림 4 >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유량규제지수의 정도를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의 지수값이 평균 206.01로 가장 높은 것을

로 나타났으며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평균값이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에서의 규제 정도는 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의 지수의 크기가 현저히 높은 것은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밖의 다른 산업의 평균 규제 지수는 90~100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산업의 규제 정도가 2008년에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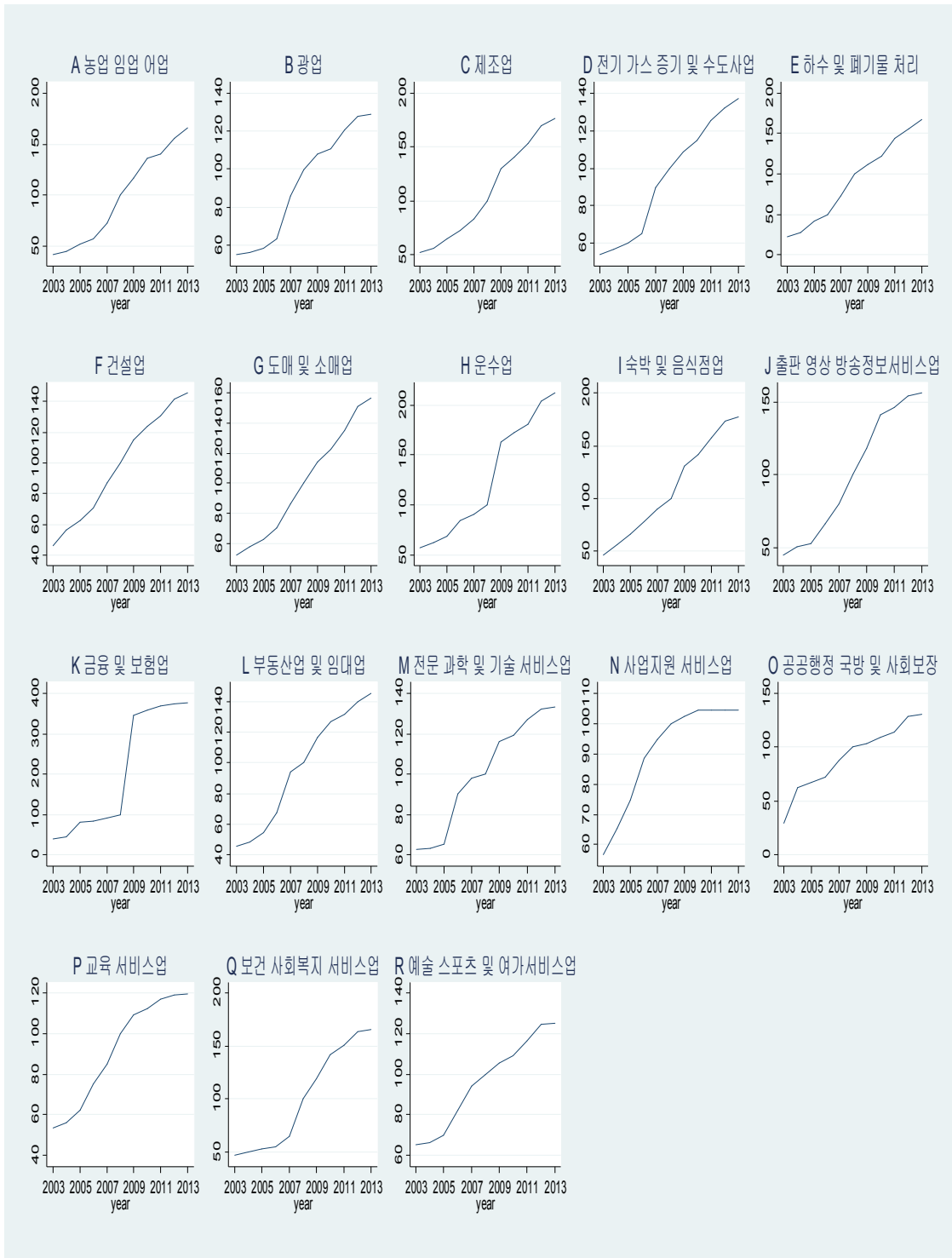
규제의 증가율 관점에서 볼 때는 금융 및 보험업과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등에서 연평균 2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광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서 2003년부터 2013년 까지 각 산업별 누적된 규제지수를 나타내는 저량규제지수의 현황 및 변화추이는 < 표 2 >와 < 그림 5 >에 제시되어 있다.

< 표 2 >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현황

업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증가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98.73	47.07	41.58	166.47	14.88
B 광업	92.29	29.57	54.99	128.89	8.89
C 제조업	108.97	46.59	51.85	176.46	13.0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4.81	31.52	53.83	136.88	9.78
E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2.09	52.42	22.77	166.89	22.04
F 건설업	98.02	35.69	45.92	145.38	12.21
G 도매 및 소매업	100.88	37.87	52.20	156.81	11.63
H 운수업	126.78	59.83	56.99	211.82	14.03
I 숙박 및 음식점업	110.79	47.34	46.58	177.04	14.2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95	44.09	45.01	155.98	13.23
K 금융 및 보험업	206.01	153.39	40.19	375.26	25.0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97.22	37.87	45.62	145.20	12.2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64	27.41	62.63	133.20	7.8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1.01	17.56	56.57	104.59	6.3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1.41	30.83	29.75	130.46	15.93
P 교육 서비스업	91.78	26.25	53.58	119.69	8.3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11	48.92	46.92	165.72	13.4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6.21	22.56	65.04	125.31	6.78

< 그림 5 >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저량규제지수의 값은 누적된 규제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 표 2 >에 제시된 표준편차의 값은 2003년에서 2013년까지의 분석기간 중 규제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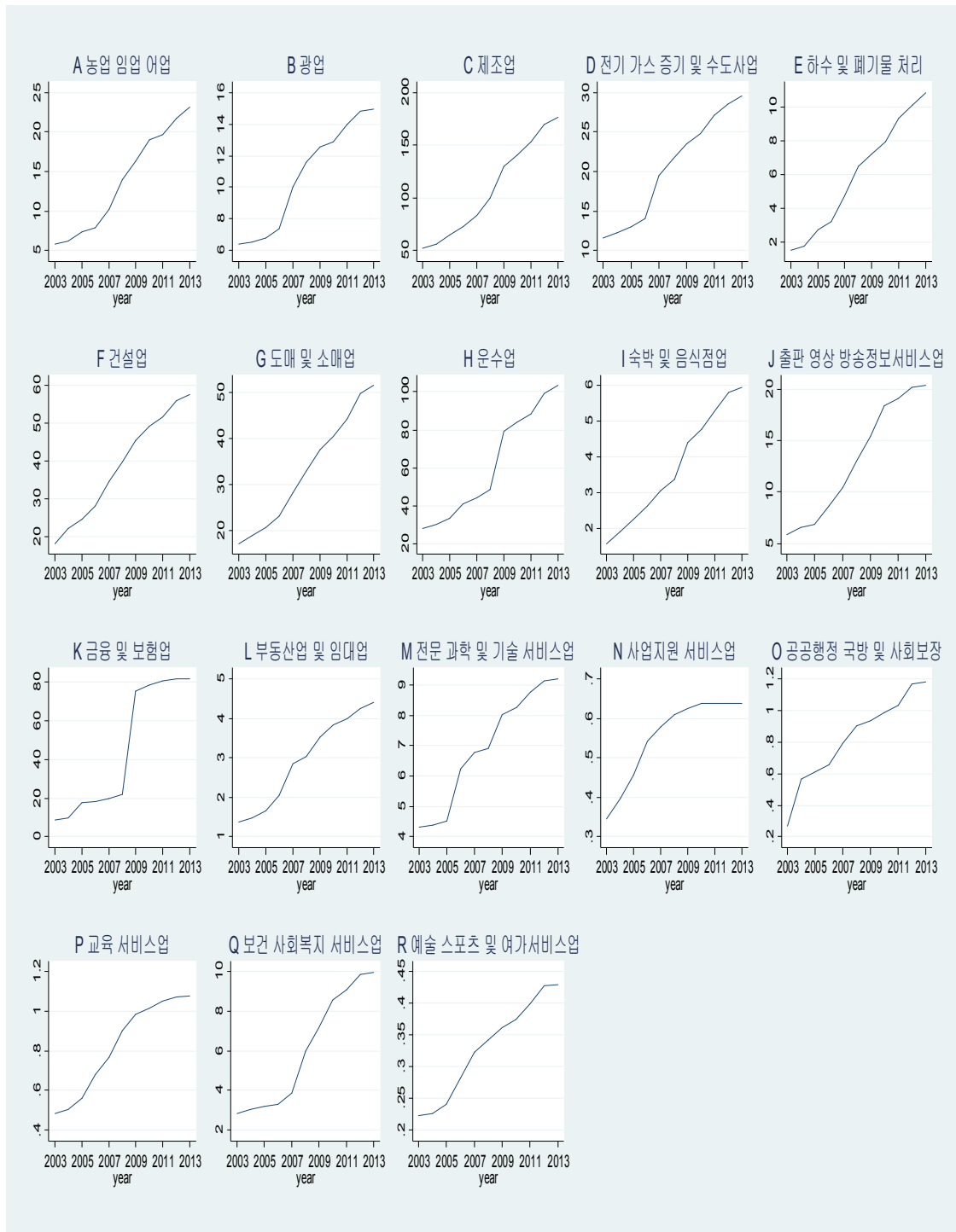
적인 변화량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저량규제지수의 표준편차가 가장 큰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53.39)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운수업(59.83),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52.42) 등에서 표준편차가 5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7.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56), 교육 서비스업(26.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7.41), 광업(29.57) 등에서 30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편차를 보여 규제의 변화폭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서 누적 규제지수의 평균 증가율의 크기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준편차의 변화의 정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금융 및 보험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등의 평균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낮은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조업 대비 여타산업의 규제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제조업지수를 100으로 놓고 타산업의 규제수준을 정규화 시킨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 제조업 대비 산업별 평균 저량규제지수를 보면 제조업이외의 산업의 규제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과 < 그림 6 > 참조).

< 표 3 >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현황

업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증가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13.76	6.56	5.80	23.21	14.88
B 광업	10.72	3.43	6.39	14.97	8.89
C 제조업	108.97	46.59	51.85	176.46	13.0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50	6.82	11.64	29.59	9.78
E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99	3.41	1.48	10.85	22.04
F 건설업	38.94	14.18	18.24	57.75	12.21
G 도매 및 소매업	33.10	12.43	17.13	51.45	11.63
H 운수업	61.81	29.17	27.78	103.26	14.03
I 숙박 및 음식점업	3.72	1.59	1.57	5.95	14.2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16	5.75	5.87	20.33	13.23
K 금융 및 보험업	44.93	33.45	8.76	81.84	25.0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5	1.15	1.38	4.40	12.2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5	1.89	4.33	9.20	7.8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55	0.11	0.34	0.64	9.1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83	0.28	0.27	1.18	15.93
P 교육 서비스업	0.83	0.24	0.48	1.08	8.3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7	2.94	2.82	9.96	13.4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33	0.08	0.22	0.43	6.78

< 그림 6 >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다만, 운수업의 평균 저량규제지수가 61.8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이어 금융 및 보험업(44.93), 건설업(38.94), 도매 및 소매업(33.1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수업의 기간 평균 규제지수

61.81은 2008년 제조업 규제 정도에 비해 약 62%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제조업에 누적적으로 부과된 규제의 정도가 운수업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타 업종의 경우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의 평균 저량규제지수는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에서의 규제의 정도가 더욱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2008년 제조업 대비 산업별 평균 유량규제지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와 < 그림 7 > 참조). 유량규제지수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누적된 규제와는 달리 해당 년도에 신규로 제정된 규제의 양과 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분석기간 평균 유량규제지수인 69.45는 2008년 제조업 규제의 69.45%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말해 2008년 제조업의 규제정도가 다른 해 평균의 1.4배정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2008년 제조업 규제수준은 상대적으로 유량규제수준이 높은 운수업(41.68), 금융 및 보험업(40.7)에 비해 약 2.4배정도 규제강도가 센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지수가 10 이하인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 4 >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현황

업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증가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5	6.28	2.49	22.34	2.29
B 광업	4.72	4.63	0.75	15.81	1.98
C 제조업	69.45	43.92	21.46	178.36	6.91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7	8.08	3.75	31.98	5.50
E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16	3.03	0.91	10.52	16.70
F 건설업	22.99	8.98	9.65	39.23	-5.77
G 도매 및 소매업	19.54	8.83	10.24	31.97	0.11
H 운수업	41.68	49.09	8.74	181.59	10.18
I 숙박 및 음식점업	2.43	1.48	0.61	6.20	2.63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96	6.01	1.21	17.46	-1.43
K 금융 및 보험업	40.70	93.57	1.35	320.05	-19.8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9	1.24	0.50	4.86	-5.4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1	3.10	0.34	10.22	-4.1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17	0.16	0.00	0.51	-9.4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50	0.50	0.06	1.77	3.84
P 교육 서비스업	0.34	0.26	0.04	0.81	-14.9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6	3.84	0.61	12.74	-11.8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2	0.08	0.01	0.25	-18.67%

< 그림 7 >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 III. 규제와 경제성장간 실증분석

#### (1) 분석 모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모형(Panel model)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고려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한 후 확률효과(random effect model) 혹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같은 패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일반 모형으로 설정한다.

$$y_{i,t} = \beta_0 + R_{i,t}\beta_1 + X_{i,t}\beta_2 + T_t\beta_3 + \mu_i + \epsilon_{i,t} \quad (1)$$

여기서 종속변수  $y_{i,t}$ 는 산업  $i$ 의  $t$ 년도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R_{i,t}$ 는 산업  $i$ 의 해당년도( $t$ ) 개별 산업의 규제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의미하며  $X_{i,t}$ 는 산업별 R&D 지출액, 산업별 더미변수를 포함한 변수를 나타낸다.  $T_t$ 는 연도 더미변수 벡터로 각 연도의 전반적인 변동효과를 포착하며,  $\mu_i$ 는 산업( $i$ )별 고정효과,  $\epsilon_{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제 추정에 사용한 기본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Delta TFP_{i,t} = & \alpha + \beta_1 Regulation_{i,t} + \beta_2 \ln RD_{i,t} + \beta_3 Manu\_Dum_i + \beta_4 Serv\_Dum_i \quad (2) \\ & + A \sum_t Y\_Dum_t + \mu_i + \epsilon_{i,t} \\ & (i(\text{산업}) = 1, 2, \dots, 18, t = 2003, 2004, \dots, 2013) \end{aligned}$$

식 (2)에서  $i$ 는 분석 대상 개체인 산업을 의미하는데, 제조업 세부업종을 포함하여 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국은행(2008)과 달리,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및 성과에 보다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에 해당하는 A~R까지의 18개 업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4)</sup>.

한편 모형에서 하첨자  $t$ 는 분석대상 관측치의 각 년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산업별 관측치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종속변수  $\Delta TFP_{i,t}$ 는 각 산업별-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4) 제조업은 대분류상 C에 해당되며, 서비스산업에 해당되는 대분류 업종은 E~R까지 총 14개에 해당된다.

을, 설명변수인  $Regulation_{i,t}$ 는 각 산업별-연도별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수,  $\ln RD_{i,t}$ 는 각 산업별-연도별 R&D 투자액의 자연로그값,  $Manu\_Dum_i$ 는 제조업더미,  $Serv\_Dum_i$ 는 서비스업 더미이다. 각 산업별-연도별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Regulation_{i,t}$ 는 해당 변수의 추정 계수 값이 산업별 규제 수준의 변화가 총요소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반영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규제수준의 정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양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규제지수는 높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수준의 규제가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규제완화 즉 규제가 낮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음(-)의 유의한 계수값을 가지는 반면 규제가 완화될수록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양(+)의 유의한 계수값을 가질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 값을 갖게 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업종더미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역시 제조업이나 여타 업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을 결정짓는 차별적인 특징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모형내에  $Serv\_Dum_i$ , 즉 서비스업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업 더미를 추가함에 따라, 제조업 더미와 서비스업 더미의 추정 계수들은 기준이 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A: 농림어업, B: 광업, D: 전기, 가스, 수도 등)에 대한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의 상대적인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산업별-연도별 자료이므로, 이와 같은 자료 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하도록 패널 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각 연도에 해당하는 연도더미인  $Y\_Dum_t$ 는 전체 산업에 대해 공통적이거나 각 연도별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연도별 차이를 반영하며, 식별을 위해 2003년도 연도더미는 제외된다.  $\mu_i$ 는 관측되지 않은 개별(산업별) 이질성(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이외의 산업별 특징 혹은 요인들에 의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sup>5)</sup>

결국 정리하면, 본 연구의 패널 모형에서는 시간(연도별) 이질성과 개별(산업별) 이질성을 모두 반영함에 따라 이원 오차(two-way error component) 모형의 형태를 띠게 되며, 개별(산업별) 이질성과 시간 이질성

5)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하우스만(hausman) 검정결과 설명변수와 관측되지 않은 효과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을 모두 반영함에 따라 규제 완화의 경제성장 혹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한편, 기본 모형인 식 (2)는 산업별, 연도별 이질성은 물론 여타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는 규제완화가 경제성장 혹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여타 업종간 규제완화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업종별로 규제완화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 규제완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완화의 속도차가 추가적으로 규제완화의 효과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 (3)에 산업별 규제 수준을 나타내는  $Regulation_{i,t}$ 과 제조업, 서비스업 더미인  $Manu\_Dum_i$ ,  $Serv\_Dum_i$ , 그리고 규제완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Sp\_Regulation_{i,t}$ 과의 교차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다음의 식 (3)과 같은 확장된 모형 설정을 고려한다.

$$\begin{aligned} \Delta TFP_{i,t} = & (\beta_1 + \gamma_1 Manu\_Dum_i + \gamma_2 Serv\_Dum_i + \gamma_3 Sp\_Regulation_{i,t}) Regulation_{i,t} \\ & + \alpha + \beta_2 \ln RND_{i,t} + \beta_3 Manu\_Dum_i + \beta_4 Serv\_Dum_i \\ & + A \sum_t Y\_Dum_t + \mu_i + \epsilon_{i,t} \end{aligned} \quad (3)$$

이때, 제조업, 서비스업, 여타업종 간 규제완화의 경제성장 혹은 총요소생산성 증감에 대한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면 제조업 더미, 서비스업 더미와 규제지수 간 교차항들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이 유의한 계수값을 가질 것이며, 같은 규제 수준이라도 규제 수준의 변화속도에 따라서도 경제성장 혹은 총요소생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규제변화의 속도와 규제수준 혹은 규제지수 간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한 계수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본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 및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 > 변수 및 자료

종속변수	이용 자료 및 변수구성 방법
총요소생산성 (T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작성한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에서 제시된 산업 부문별 총요소생산성을 이용(2003년~2013년)</li> <li>· 실제 실증분석시 산업별 규제지수와 일치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 구성을 위해 총산출 가중치를 적용하여 18개 업종으로 재분류</li> </ul>
설명변수	이용 자료 및 변수구성 방법
규제지수 (regulation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규제(2003년~2013년)</li> <li>· 등록규제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류 각 산업별 규제지수 작성</li> <li>· 산업별 규제지수 작성시 실제 규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 건수 뿐만 아니라 규제강도 및 중요도를 고려</li> <li>· 실제 업종별 규제지수는 이종한(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작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함.</li> </ul>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부 ‘과학기술조사보고서’,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상 산업별 총연구개발비(2003년~2013년)</li> </ul>
기타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더미</li> <li>· 연도 더미</li> <li>· 교차항 더미</li> </ul>

#### IV. 분석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개별, 시간 이질성을 통제하고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설명변수의 형태로 통제한 후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을 측정하는 기본 모형설정, 그리고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은 물론 산업별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 규제속도에 따른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를 추가로 반영한 확장된 모형 설정을 추정한다. 이때, 각 변수들의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전술한 바와 같이 식 (2)에 기반한 기본모형 설정(모형3)과 식 (3)에 기반한 확장모형설정(모형4)은 물론 일본 내각부(2006) 모형에서와 같이  $\ln RD_{i,t}$ 를 제외한 여타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고 규제지수, 규제변화 속도의 영향만을 포함한 모형 설정들(모형1, 모형2)도 살펴보도록 한다.

모형1~모형4 추정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

장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는  $Regulation_{i,t}$ 의 계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변수를 포함한 모형설정인 모형1, 모형3, 모형4에서 모두 규제수준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음(-)의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산업별-연도별 이질성과 여타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규제수준의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규제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크며, 다양한 모형 설정에서 이와 같은 경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비록 제조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여타 산업을 동시에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IMF이후 규제완화가 진행되던 1998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의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국은행(2008)의 추정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분류 업종, 그리고 한국은행(2008)의 분석기간 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인 2003~2013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규제완화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혹은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기존의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한 바와 같이 규제의 영향력이 200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규제완화의 속도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분석결과에 있어서는 규제완화의 속도를 가급적 빠르게 하는것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한국은행(2008)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화 혹은 규제변화의 속도만을 변수로 포함한 모형2에서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지 못해 규제완화의 속도는 그 자체로는 산업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도 양(+)의 계수 값을 가지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그리고 한국은행(2008)의 추정결과와는 달리 산업별 이질성을 통제한 이후 대분류 업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더미와 서비스업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 3의 추정결과 역시 규제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형3에서는 제조업 더미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어 분석기간중에는 서비스업종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규제속도에 따른 규제 완화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최종 모형인 모형4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제조업, 서비스업, 여타 업종 간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 증감에 대한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면 제조업 더미, 서비스업 더미와 규제지수 간 교차항들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이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동일한 규제 수준이라도 규제 수준의 변화속도에 따라서 경제성장 혹은 총요소생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규제변화의 속도와 규제수준 혹은 규제지수 간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게 된다.

추정 결과를 보면, 제조업 더미와 규제 수준의 교차항은 유의한 양(+)<sup>1</sup>의 계수 값을 가지는 반면, 서비스업 더미와 규제수준의 교차항, 규제변화 속도와 규제수준의 교차항은 양(+)<sup>1</sup>의 계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경우는 여타 업종에 비해 규제완화의 효과가 명확하게 줄어들지만 규제 변화의 속도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평균적인 규제완화의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0.0770)와 제조업 더미와 규제수준의 교차항의 계수값(0.0778)이 상충되는 수준으로, 사실상 제조업에서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에서 2005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한국은행(2008)에서 제조업 더미와 규제지수간의 교차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로, 결국 2000년대에는 제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는 규제완화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규제완화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의 효과와 관련된 결과를 종합하면, 2003~2013년 기간 동안 대분류 산업 기준으로 볼 때에는 첫째, 규제완화는 산업전반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규제완화의 속도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셋째, 제조업은 규제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규제완화는 추가적인 생산요소의 투입없이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동력 및 투자 등 생산요소 투입증가가 부진하고 유가 상승 등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현 우리경제 상황에서 성장활력 제고 및 물가안정을 동시

에 달성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한국은행, 2008).

따라서 추후에도 산업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부적합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법령에 불가능한 사항을 제시하고 그 외는 허용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부작용이 작은 부문부터 전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규제완화 효과가 크므로 서비스업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규제 완화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추진 시 정부와 이익단체에서 독립된 중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기관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6> 모형 설정별 추정 결과

변수명	변수 설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alpha$	상수항	0.0165	0.41	0.013	0.32	0.0165	0.41	0.0533	1.15
$\ln RND_{i,t}$	R&D투자 잔액 로그값	0.0024	0.60	0.001	0.24	0.0024	0.60	0.0028	0.69
$Manu\_Dum_i$	제조업 더미					0.0548	1.61	-0.0208	-0.36
$Serv\_Dum_i$	서비스업 더미					0.0957***	3.20	0.0583	1.46
규제 효과									
$Sp\_Regulation_{i,t}$	규제변화 속도			-0.0002	-0.02				
$Regulation_{i,t}$	규제 수준	-0.0270**	-2.13			-0.0270**	-2.13	-0.0770**	-2.31
교차항									
$Manu\_Dum_i \cdot Regulation_{i,t}$	제조업x규제수준							0.0778*	1.69
$Serv\_Dum_i \cdot Regulation_{i,t}$	서비스업x규제수준							0.0429	1.43
$S\_Regindex_{i,t} \cdot Regulation_{i,t}$	규제변화속도x규제수준							0.0005	0.95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참고문헌>

- 국내연구 -

한국은행(2008),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중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pp 59-99.

이종한(2013),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3-09

- 국외연구 -

Bourlès, R., Cette, G., Lopez, J., Mairesse, J., Nicoletti, G., (2009), Do product market regulations in upstream sectors curb productivity growth? Panel data evidence for OECD countries,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283

Busse, M. and Groizard, J.L. (2008)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ions and Growth, World Economy, Vol 31 Issue 7 pp 861-886

Djankov, S., McLeish, C., Ramalho, R., (2006), Regulation and Growth, World Bank Working Paper

Frontier Economics(2012), “The impact of regulation on growth”.

Gorgens, T., Paldam, M., Wurtz, A., (2003), How does Public Regulation affect Growth? University of Aarhus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Working Paper No 2003-14

Griffith, R., Harrison, R. and Simpson, H., (2010), Product Market Reform and Innovation in the EU,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pp 389-415

Jacobzone, S., Steiner, F., Lopez Ponton, E., Job, E., (2010), Assessing the Impact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ECD Working Paper on Public Governance No 17

Poschke, M., (2010), The Regulation of Entry and Aggregate Productivity Economic Journal Vol 120, pp 1175-1200